



# 주간 통일정세

2009-12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가극 '홍루몽' 현지지도(3/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중국의 고전을 북한판으로 개작한 가극 '홍루몽'의 제작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노세대 지도자들이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귀중한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며 "문화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장성택 최익규 김양건 당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
  
- **김정일, 광장서 군인 집단 격려(3/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군 전초병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앞 광장에서 만나 격려하고 기념촬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또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빙상관, 창광원 등의 건설에 투입된 '군인 건설자들'도 만나 치하하고 기념촬영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두 군인집단을 단체로 만난 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
  - 북한 언론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상 '전초병열성자들'과 '군인기술자들'은 각각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김 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 앞 '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임.
  - 검은 털모자를 쓰고 흰 외투와 짙색 바지 차림의 그는 임시 설치된 계단식 좌대에 도열한 수백 명 앞을 걸어가며 이들의 환호에 오른 팔을 들어 답례하거나 좌대 앞에 서서 두팔을 어깨 높이로 치켜들어 박수로 격려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깎지 낀 채 걷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얼굴은 다소 험칙한 얼굴이었지만 광장에 기념촬영을 위해 층층이 줄을 지어 서있는 군인들 앞을 걸으면서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치거나 오른팔을 쭉 펴서 환호에 답례를 보내는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 행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 시절 ‘박 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보도됨.
- 레브도에 따르면, 김정운은 ‘1983년 1월 8일생’으로 올 1월 8일로 26세가 된 것으로 추정됨.
  - 베른국제학교의 론 슈워츠 체육교사는 김정운에 대해 “그는 떠날 당시 9~10 학년이였다”면서 “그는 학교 농구부와 수영부 활동을 했고,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팀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강인했다”고 회고, 김정운은 1998년 15세때 스위스를 떠남.
  - 베른국제학교의 교장이었던 다비드 카틀리는 김정운에 대해 “솔직한 아이였고 친구들과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아이였다”면서 “특히 친구들과 중에 미국 외교관 자녀들이 많았다”고 술회
  - 하루 수업을 마치면 북한 대사관에서도 김정운을 픽업하러 왔으며, 당시 김정운의 학교 친구들은 그의 아버지가 ‘대사관 운전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정운은 일종의 보디가드로 보이던 ‘광철’이라는 또 다른 북한 학생이 김정운과 늘 함께 다녔다고 증언, 슈워츠 교사도 “광철은 체격이 좋고 무뎠으며, 그를 도와서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했다”고 증언.

#### 나. 정치 관련

- **北, 美 인도지원도 인권과 결부 비난(3/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유엔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배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주의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보호’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교육·문화·외교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다원화, 경제분야에서의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강요”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 **北, 美도 인공위성 인정하는데…南은 부인(3/2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1일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도 북한이 내달 초 발사하려는 로켓에 대해 미사일이 아닌 ‘인공지구위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남한당국은 여전히 탄도미사일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
  - 통일신보는 “공화국(북한)이 발사하려는 인공지구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우겨대던 미국도 이제는 그것이 인공지구위성이라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며 남한 당국이 “그 무슨 대응조치와 국제적 공조로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는 것은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남조선의 보수 당국이 동족의 위성발사까지 걸고들며 도발과 적대행위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北, ‘만경대 가문’ 또 강조(3/21, 통일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년전 자강도 현지 지도 당시 조부 김형직, 아버지 김일성 주석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의 3대”를 언급하면서 “만경대 가문이 대를 이어 개척하고 실현해 나가는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고 통일신보가 21일 보도
- 통일신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999년 가을 자강도내 여러 지역을 현지 지도하던 중 량림군으로 가는 직령을 차로 넘으면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는 표지비를 보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만경대 가문의 3대가 대를 이어 걷는 길이 되었다”라고 언급했다고 소개

#### ● 량강도당 책임비서에 김히택으로 교체(3/22, 조선중앙방송)

- 백두산 일대를 관할하는 북한 량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김정호에서 김히택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량강도 삼지연군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히택 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김철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과 보고회에 참가해 기념보고를 했다고 보도
- 김 신임 도당 책임비서의 경력은 1980년 량강도 갑산군 행정위원회(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부 부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짐. 그와 같은 이름으로 김히택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있지만 동명이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전임 김정호 도당 책임비서는 4월 4일자로 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량강도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 현지지도에 수행했으며 4월 9일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지시 관철 궐기모임에 참석한 것을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 ● 北 당 선전선동부장에 최익규 임명(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익규 전 문화상이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체제 선전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피바다가극단’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극 ‘홍루몽’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익규 당 부장이 장성택(행정부)·김양건(통



- 일전선부) 당 부장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고 소개
- 한 대북소식통은 “최익규 전 문화상은 지병으로 은퇴했다가 지난 2월 공석이었던 당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 최 부장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문화상으로 임명됐으나 2005년 10월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은퇴했다가 지난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선출되면서 대외에 건재를 과시, 최 부장은 김 위원장이 아직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되기 훨씬 이전인 1960년대 중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감독으로 일하던 당시 영화부문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오랜 최측근임. 또 1970년대 초반부터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운의 생모이자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출신인 고영희씨와도 절친했으며, 현재 정운의 후계수업과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짐.
  - 최 부장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는 과정에 1986년 북한에 피랍됐던 신상옥, 최은희씨의 탈북에 대한 책임과 영화제작 과정의 비리에 연루돼 잠시 좌천되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과 고영희씨의 각별한 신임으로 재기, 최 부장은 당 관료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영화, 가극, 연극 감독으로도 손꼽힘.
  - 그는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 직함을 가진 채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꽃파는 처녀’(1972), ‘유격대 오형제’(1968), 김일성 주석의 항일활동을 소재로 한 ‘조선의 별’(1-10부, 1980~87), ‘민족과 운명’(1-50부) 등 북한이 이른바 명작으로 내세우는 우수한 영화를 직접 연출, 제작
  - 한편 전임자인 정하철 당 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은 당 조직지도부가 2005년 5-6월 ‘농촌 총동원기간’ 대낮에 안이하게 음주판을 벌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집중검열’을 진행하는 과정에 과거 중앙방송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 부장의 업무상 과오를 문제 삼으면서 철직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짐.
- **北, 南 인권 제기에 남북관계 정상화 없어(3/20,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남한이) 인권모략 소동에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대화나 북남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조평통은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인권모략 소동으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것은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

- **北, 발사 직후 최고인민회의 12기 첫 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직후인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20일 발표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월 16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상정(3/20,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이 유력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은 20일 이 결의안의 주상정국인 체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이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보도
- **北, 모든 나라, 우주진출 권리 있다(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경선이나 경계선, 관할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한 우주는 전 인류의 것”이라며 우주이용의 정당성을 강조
  - 통신은 ‘우주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이란, 베트남의 위성발사와 중국, 인도 등의 위성발사 계획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 맞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활동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우주진출 권리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다. 경제 관련

- **문타폰, 북한 870만명 식량불안정 상태(3/20, 연합뉴스)**
  - 유엔은 북한 주민 870만 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지역의 날씨가 비교적 좋았음에도 작황이 늘지 않은 것은 비료 및 연료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870만 명 가량의 주민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
  - 문타폰 보고관은 또 “고문이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곤경을 완화하는 데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보고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즉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 및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개처형 등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美단체, 北 전역 심장의료체계 구축 추진(3/19, 미국의소리방송)**
  - 지난 1998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인 ‘글로벌리소스 서비스(GRS)’가 북한 전역에 종합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올해부터 대북 사업을 의료와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올해도 황해남.북도과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주민 15만명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2004년부터 콩 농장과 두부 제조공장, 두유, 콩기름 공장 등을 세운 황해북도 곡산군에 된장과 간장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GRS는 또 북미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 중국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미국인 강사들이 평양외국어대학 영문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2년에 한번씩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캐스팅 크라운즈’, ‘애니 모세스 밴드’ 등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스프링스 회장은 설명
- **WFP, 北 당국 철수요청 안받았다(3/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부인하고 계속 북한에 남아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WFP가 북한에서 철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계속 남아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주장
- **美구호단체, 북한 떠나라 통보 받아(3/17, 연합)**
  - 미국의 추가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구호단체들에도 이달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 국제 구호단체 ‘머시 코(Mercy Corps)’의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머시 코’를 포함한 5개 구호단체에 3월 말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힘.
  - 포텔라 대변인은 “그들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당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힘. ‘머시 코’는 그동안 ‘월드비전’, ‘글로벌리소스서비스(GRS)’,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 배급 활동을 펴 왔으며, 예정된 활동 기한은





오는 5월까지였음.

- 이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들여온 식량은 모두 7만1천 톤에 달하며, 이중 5만 톤은 배급이 완료됐음. 포털라 대변인은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을 걱정

#### 라. 군사 관련

##### ● 北로켓, 4월4일 발사될 듯(3/20,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일본 지지통신)

- 북한이 4월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사가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일본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
- 지지 통신은 기상 악화나 마지막 순간 고장만 없다면 북한은 4일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보도
- 북한은 3월 11일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4월 4~8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3단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 북측 발표로는 로켓 발사 직후 1단 로켓 추진체는 동해에, 2단 로켓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께는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北, 21일부터 군통신선 정상화(3/21, 연합)

- 북한은 21일 오전 8시부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3.9~20) 차단했던 군 통신선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북측이 내일 오전 8시부터 통신선을 회복한다고 오늘 오후 통보해 왔다"고 밝힘.
-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에 보낸 팩스(전통문)를 통해 "우리(북)측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로부터 차단하였던 북남 군통신을 21일 8시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측은 키리졸브 훈련 종료일인 20일 우리 측 인사의 방북 및 귀환 계획에 대해 동의 통보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관계자의 방북과 귀환이 무산되었음. 북한이 통행을 차단한 것은 훈련 개시일인 3월 9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임.
-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9일 1차로 통행을 차단했다가 10일 정상화했지만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한데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통행을 전면 허용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 창광거리 식당들 개보수 완공 단계(3/21, 우리민족끼리)

- 평양 창광거리에 밀집한 유명 음식점 18곳에 대한 개건(개조) 공사가 착공 1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21일 보도, 우리민족끼리는 창광봉사관리국 산하 18개 식당의 개건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설비 이동과 내.외부 벽면 및 보도 타일 붙이기, 주방 신축, 상.하수도 망 공사, 지붕 씌우기, 잔디 심기 등의 작업이 끝났다고 소개

\* 창광거리는 평양 역전에서 시작해 고려호텔을 거쳐 노동당 청사로 이어지는 거리로, 평양을 대표하는 고급 음식점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점들이 자리잡고 있음.

● 北, 외국어 시청각설비 자체개발·보급(3/1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이 "시청각 설비에 의한 외국어 교육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이 기금은 북한이 교육기관 후원을 위해 2005년 1월26일 설립한 민간단체임.
- 외국어 시청각 설비는 지난해 4월부터 평양제4소학교, 평양창덕중학교, 함경남도 락원군 서중중학교, 남포교원대학 등 20여개 소, 중학교들과 대학들에 도입, 기금은 앞으로 국내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가의 외국어 시청각 설비들을 대량 제작해 더 많은 학교들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소개

● 北, 광통신망 원격진료 시범실시(3/18, 조선신보)

- 북한이 광케이블 통신망을 이용해 "먼거리의료(원격진료) 봉사"를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만유병원, 평안북도인민병원, 만경대구역인민병원을 원격진료 시범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에 협의용 카메라, 액정표시 장치, 컴퓨터, 전자심전계, 전자현미경 등을 갖춘 원격진료실을 만들. 이들 병원은 김만유병원을 중심으로 전용 빛섬유(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고속정보망으로 연결되어, 김만유병원의 지방병원 담당과가 지방병원들의 원격진료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임.
- 김만유병원은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협의체계와 원격원트겐진단협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오래전부터 원격진료를 준비해왔다고 신문은 설명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조선신보, 北발사 美제재시 6자회담 중단(3/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인공위성 발사계획 통보는 조선이 제공한 <자성의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월의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며 ‘광명성 2호’를 예정대로 4월 4~8일 사이에 발사했을 때 미국이 “제재와 압력”에 나설 경우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에 의해 유지돼온 조선(북한)과의 대화 과정은 중단 위기에 직면”할 게 확실하다고 조선신보가 19일 주장
- 남한과 일본에 대해서도 신문은 “‘미사일’ 소동이 확대될 경우 그 귀결은 출구가 없는 벼랑대치”라며 “조선의 군대는 자주권 침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눈앞의 ‘위기’를 과장하기보다 사태의 수습을 내다본 발사의 차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문
- 조선신보는 이날 또 ‘파탄 면치 못할 이명박식 <실용주의>’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에선 한반도의 대결구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권이 대화와 대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 ● 北, 핵시설 불능화 속도 늦춰(3/17, 연합)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속도를 다시 늦췄음.
-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하루 15개에서 일주일에 15개로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언급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러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을 끝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지원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 나. 북·미 관계

#### ● 北, 미국인 2명 억류 조사 중(3/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 일 조.중(북한-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었다” 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 다. 북·중 관계

##### ● 김영일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3/21, 연합)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 등 북한 대표단이 21일 4박5일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
- 김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지난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했음.
- 김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수행

##### ● 원자바오, 북·중 회담서 김정일에 안부(3/18, 연합)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18일 양국 총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논의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25분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 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 13명과 함께 총리회담을 시작, 원 총리는 “김영일 총리의 중국 친선 방문을 환영하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김정일 총비서와 다른 지도부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인사
- 회담에 북한에서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13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등 13명이 참석

##### ● 방중 北총리, 산둥성 당서기와 담화(3/17, 조선중앙통신)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가 17일 산둥(山東)성(省) 성도인 지난(濟南)시(市)에서 장이강(姜異康) 산둥성 당서기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라. 북·러 관계

##### ● 러 특사, 北 위성발사 과대해석 경계(3/17,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는 러시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과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로그비노프 특사는 17일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국제사회는 오는 4월 초에 있을 북한 위성 발사의 모든 상황을 신중히 살펴 공황상태로 빠져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 ● 북·러 친선협조 강조(3/17,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언론매체들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 포함)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기념 논평을 게재하고 이 협정이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역사적 계기로 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간 처음 체결된 이 협정 이후 지난 60년간 양국은 “협정에 기초해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친선의 유대를 두터이 해 왔다”며 이 같은 친선강화 발전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국제관계 수립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민주조선도 기념논평에서 양국 친선이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
- 김영일 총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인민은 상호 왕래와 교류,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가 쌍방사이에 합의된 공동문건의 정신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 ●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에 즈음한 사진전시회가 16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가

#### 마. 북·일 관계

#### ● 日방위상, 北 미사일 요격 월내 명령(3/21, 아사히 신문)

-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 제82조 2항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



-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바. 기타외교 관계

##### ● EU 트로이카 대표단 방북(3/21, 조선중앙통신)

- 이리 쉬틀레르 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 ‘트로이카(EU 순회의장국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사무국)’ 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 귀국(3/21, 조선중앙방송)

- 방북했던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비행장에서 박경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표단을 전송

##### ● EU, 北 유엔 결의 이행해야(3/17, 연합)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EU 집행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먼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프로세스(결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언급하고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북한을 거듭 압박

##### ● 北공보위대표단 증동 방문(3/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정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공보위원회 대표단이 증동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1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북한 주재 시리아 임시대사가 대표단을 전송

### 3. 대남정세

##### ● 軍통신선복원 첫날 215명 방북·415명 귀환

-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3.9~20) 끊었던 군 통신선을 21일 복원함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날 개성공단 관계자 215명이 방북하고 전날 귀환하려다 못한 인원을 포함, 총 415명이 남으로 복귀
- 이에 따라 21일 오후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552명이라고 통일부는 발표

- 지난 20일 키리졸브 훈련기간 세번째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던 북한은 이날 오전 복원한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 인원 및 차량의 출입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음.

● 못자리용 비닐 대북 지원 사실상 무산(3/20, 연합)

- 올해 정부 차원의 첫 대북지원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못자리용 비닐의 지원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무산
- 통일부와 민간단체 간 정책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못자리용 비닐의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간단체측이 '시기성'을 내세워 자금지원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 측은 '결정 유보' 입장을 견지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미사일

##### ● 한·중 6자수석, 24일 베이징 회동(3/22)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함. 외교소식통은 22일 “위성락 본부장이 이번 주초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24일 오후 우다웨이 부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위 본부장은 방중을 마친 뒤 바로 미국도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위 본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간 첫 만남인 이번 베이징 회동에서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 로켓 발사 동향과 대응책,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위 본부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며 6자회담 재개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상기하고 6자회담 의장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이를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발사시 대응책 마련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본부장은 미국 방문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 등을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 ● 日방위상 “北 미사일 요격 월내 명령”(3/21)

-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 제82조 2항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이 조항의 사상 첫 적용이 됨.
-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국을 방문 중인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두가지 명령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그 판단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요격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북한의 발사체가 국제기관에 통보했던 대로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궤도를 취할 경우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실패로 탄두부분과 추진체 등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 낙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격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요격에 대비해 수도권 지역 등에 배치된 요격용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3(PAC3)를 북한의 발사체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2개현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 **클린턴, 여기자 억류 직접 챙겨(3/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의한 여기자 2명 억류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국무부가 20일 밝혔다. 또 미국 정부는 긴급적 이번 사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자제하면서 활발한 물밑외교를 통한 사건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장관이 지금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을 자제할수록 이해당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 정도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 **“日, 내주중 미사일 파괴명령 내릴듯”(3/20)**

-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발사를 준비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법에 근거해 사상 최초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주중 발동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일 전함.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파괴조치 명령을 경계 수위가 높은 각료회의 결정으로 할지에 대해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방위상이 자위대에 파괴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의미는 있지만 반대로 “일본에 낙하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상이 기한을 정해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다소 우세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짐. 이 경우는 북한측이 기한이 끝난 뒤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로 이뤄짐.

●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상정(3/20)**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이 유력



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방송은 20일 이 결의안의 주상정국인 체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이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함.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했으나 같은 해 11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엔 공동제안국으로도 참여함.

#### ● 정부, 北로켓발사시 PSI 전면참여 검토(3/20)

-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응 카드로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함.
-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의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음.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음.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부는 미국의 PSI 정식참여 요청에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정식 참여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음.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열어볼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2006년 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말한 바 있음.

#### ● 中·日 6자회담 대표, 22일 베이징 회동(3/20)

-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일본 외무성은 19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북한이 이론상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



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미군 고위장성은 탄도미사일로 판명되면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에 북한은 로켓 발사 중단 압력을 일축하면서 (북한의 로켓에 대한) 요격 시도는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0일 중국을 방문해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면담할 예정임.

### ● 北, 발사직후 최고인민회의의 12기 첫 회의(3/20)

- 북한은 20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첫 회의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직후인 내달 9일 평양에서 연다고 밝힘.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의 소집에 관한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상임위는 또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공고를 통해 “대의원 등록은 4월 7일과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내달 4일과 8일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12일 통보한 데 이어 발사 직후인 9일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광명성 2호 발사의 대내외적인 정치·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11기 때와 같은 숫자인 총 687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 46%의 교체율을 보였으나 고위층 대의원들은 큰 변화가 없었음.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 3기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동시에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의 조직·인사 정비, 예·결산 심의 등의 의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임.

### ● “北, 알래스카 타격가능 미사일 실전배치중”(3/20)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북한이 일본 오키나와, 괌,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현재 실전 배치중이라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또 북한이 내달 로켓을 발사하면서 여러 발(several)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군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 샤프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은 사거리와 살상·파괴능력, 정확성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실전부대에 수 백기의 미사일을 보유하는 동시에 자국내 사용과 대외 수출을 위해 미사일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힘. 이어 그는 북한이 이미 구축돼 있는 연결망을 통해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성능이 향상된 탄도미사일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에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6발의 다른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북한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로켓 발사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와 관련,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분석함.
-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함. 그러나 샤프 사령관은 “지난해 불거진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는 북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체제의 생존문제”라고 지적함.
-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핵불능화 문제에 언급,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로 불능화를 재개했고, 지금도 아주 느린 속도 이기는 하지만 원자로에서 (사용후)연료봉을 제거하는 불능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함.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을 표적으로 발사하는 어떤 미사일도 미군이 요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힘. 키팅 사령관은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집결시킨 군대 등 상당한 재래식 군사능력과 강력한 미사일 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이야말로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힘. 키팅 사령관은 그러나 “우리(한국과 미국)는 북한에 의한 단기적이고, 명백한 도발행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 ● 中, 6자회담 조속한 개최 희망(3/19)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6자회담의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당연히 6자회담의 진전과 차기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함.
- 친 대변인은 “6자회담의 개최에는 조건이 성숙해야 하고 참가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은 나머지 5개국과 대화와 협조를 강화해 회담 개최를 촉진하고 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취하는 태도와 입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함.



### ● 李국방 “인공위성도 군사적으로론 미사일”(3/17)

- 이상희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힘.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그같이 답변함. 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위협과 미사일 발사 준비, 전선에서의 대비태세 등에 대해 대남, 대미 차원에서 전략적 의도를 판단하고 있고 정부부처 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함.
- 또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기술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한·미간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함. 그는 “포괄적 의미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한미연합으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함. 이 장관은 “북한이 제시한 좌표는 괌의 북쪽 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괌은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기지”라며 “북한의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향하든 모두 우리의 전시 증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이든 장거리미사일이든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함.
- 그는 또 “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과 다른 위협을 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북한의 발사체 성공 가능성과 관련, 이 장관은 “현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함. 그는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영토를 침범하거나 미국을 향해 날아올 때 요격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요격은 그들의 판단”이라고 함.

### ● 北, 핵시설 불능화 속도 늦춰(3/17)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속도를 다시 늦춤.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하루 15개에서 일주일에 15개로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말함.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러 4개국은 증유를 포함, 증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함.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증유 20만t 제공을 끝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지원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됨.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검증문제를 떠나 지금의 미사일 정국에서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기존의 지원 유보방침을 재확인함. 이에 따라 중국이 지원을 완료하고 대북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은 폐연료봉 제거 작업을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분석임.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음. 이중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 500개 안팎이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짐. 특히 북한은 불능화 속도에 비해 경제·에너지 제공 속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英외무차관 “北로켓 발사 유엔제재 가능”(3/17)

-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제재안 역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빌 램멜 영국 외무차관이 17일 밝힘. 일본을 방문 중인 램멜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제재 조치들은 이미 1718호(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및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결의)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함.
- 램멜 차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자국의 ‘위성체’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영국 정부가 이미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영국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앞서 16일 진행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의 회담과 관련, 램멜 차관은 양국이 다음달 2일 열릴 G20(주요 20개국) 회담 및 이란 핵 문제는 물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힘. 램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 나. 미·북 관계

#### ● 北신문 “美, 인도지원도 인권과 결부” 비난(3/22)

- 유엔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날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배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주의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제압하는데 인권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반제지주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끄집어내 범죄시하는 반면 저들에게 굴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국으로 찬미하는 등 인권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美여기자 2명, 평양 압송된 듯”<소식통>(3/22)

- 북한이 북중 국경지대인 두만강에서 취재도중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을 평양으로 압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대북 소식통들이 말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이미 미국 여기자 2명은 평양으로 압송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직접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들은 모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영토 쪽으로 넘어갔다 이를 제지하던 북한군에 여자 2명은 잡히고 남자 2명은 중국 쪽 폐쇄회로(CC)TV에 찍혀 중국 국경수비대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 “美이지스함 동해상서 北로켓 탐지.추적”(3/22)

-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미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했던 존 매케인함(9천 200t급) 등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동해상에 계속 머물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이지스 구축함은 4월 4~8일 발사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기본으로 하지만 유사시 요격 임무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매케인함(DDG-56)은 이달 28일 부산항에서 함장 이.취임식을 한 뒤 동해로 나가 북한의 로켓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함장은 한국계 ‘제프리 J 김’ 중령이 맡음. 이지스함에는 1천km 내의 모든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4개의 고정식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할 수 있음.
- 특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대공미사일과 1.2초에 1발씩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96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에 대해 요격명령이 하달되면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음.
- SM-3 미사일은 음속의 8배로 고도 160km 이상까지 날아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보통 요격 실험에서는 적의 미사일 1기에 SM-3 5기 가량이 발사됨. 일본도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배치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北 “미국인 2명 억류해 조사중”(3/21)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조.중(북한-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었다”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21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짧게 이같은 사실을 밝혔음. 북한이 미국인 기자 2명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 보도가 처음임.
-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는 지난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음.

### ● 보즈워스 “대포동발사로 美 對北정책 극적변화”(3/20)

- 한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미사일 및 핵위기 등 최근 20여년 간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순간들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을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긴박하게 움직였던 양 국의 전직 대사 11명이 직접 쓴 영문 회고록 ‘대사 비망록 - 대사들의 눈을 통해 본 한·미관계’가 한·미경제연구소(KEI)에 의해 19일 워싱턴에서 발간됨.
-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게 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는 이 회고록에서 자신의 주한대사 재임기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1998년 8월말 북한이 3단계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까지 발사하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으며, 여론과 의회의 압력을 받은 빌 클린턴 행정부는 서둘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함.
-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대북특사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잇따라 북한에 보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그는 평가함. 그는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숨겨진 의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간단히 잊혀지고 결국 붕괴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짐.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가 10년여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 보즈워스 대표는 또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에 이은 북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답방이 이뤄진 후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자신은 “대통령의 방북은 성공적인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





● 北 유엔관계자 “억류기자 범따라 처리되겠죠”(3/20)

-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19일 이 기자들이 북한의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힘.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기자 2명의 억류 문제를 물어보자 “붙잡힌 것이 맞느냐”고 반문, 자신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음을 내비치며 “잡혔으면 우리 공화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겠죠”라고 말함. 그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측 영토에) 들어왔으면 법적으로 처리돼야지 않겠느냐”고 덧붙임.

● “北억류 美기자는 한국계·중국계”<NYT>(3/19)

-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여기자는 중국계인 로라 링(Laura Ling)과 한국계인 유나 리(Euna Lee)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함. NYT는 이들이 지난 17일 오전 북한 국경수비대에 의해 조선족인 중국인 가이드와 함께 체포됐다고 인권활동가 등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억류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도왔던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세 명이 북한군에 억류됐다”고 말함. 그는 17일 오전 6시 이들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으며 통화 과정에서 너무 국경에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이들이 욕심을 낸 것 같다고 말함. 천 목사는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북자 취재를 위한 두 여기자의 중국 여행 계획을 돕기 위해 최근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두 여기자는 두만강변의 접경 지역에 있으며 중국 단둥(丹東)시 근처로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말함. 억류된 이들은 엘 고어 전 미 부통령과 조엘 하얏트가 설립한 국제 케이블TV 네트워크인 커런트TV의 ‘뱅크드’ 프로그램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짐.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커런트 TV의 제작진 미치 코스 씨의 억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NYT에 따르면 천 목사는 최근 북한 국경 경비대원들이 외부인들을 국경 쪽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유혹하고’ 인질로 붙잡은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함.
- AP는 애런 타버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 미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곧 다룰 것이라고 보도함. 또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중 변경지역에서 미국인들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함.



### ●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北 열약상 구체화” <RFA> (3/19)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상정될 예정인 대북 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종래 결의 때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명시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이 방송은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초안은 “지난해에 비해 더 적나라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열거했고 북한의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도 거론했다”며 “새롭게 첨부된 구절은 북한 내의 심각하고 만연된, 또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초안은 “특히 북한 당국의 고문행위,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를 노동수용소에 감금하는 행위를 지적했다”고 방송은 말함. 초안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토록 함.
- 유럽연합(EU)의 순회의장국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의 주상정국인 체코 관계자는 “결의안 상정시한은 19일이고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표결은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마지막 주인 23일 이후에 있다”고 말함.

### ● WFP “北 당국 철수요청 안 받았다” (3/19)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부인하고 계속 북한에 남아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WFP가 북한에서 철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계속 남아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WFP를 통한 지원분의 선적을 중단한 이후 대북지원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와 호주의 지원으로 북한의 취약 계층에 식량을 계속 배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식량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협의가 실패로 끝난다고 해도 미국 이외의 다른 식량 공여국이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중 일부의 분배사업을 담당해 온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도 분배사업에 참여했던 “구호단체들이 모두 쫓겨나게 됐다고 말하면 제대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야 정확하다”고 말함.
- 그는 “우리 구호요원들은 여전히 북한에 있고, 북한에 들어간 식량을 모두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최근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회’에 속한 관리들이 방미 기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GRS의 본부에 들러 당시 열린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사진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고 덧붙임.

### ● 美단체, 北 전역 심장의료체계 구축 추진<VOA>(3/19)

- 지난 1998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가 북한 전역에 종합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올해부터 대북 사업을 의료와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전함. GRS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식량 50만t중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 하는 10만t의 북한내 분배사업에도 참여해 옴.
- 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18일 워싱턴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심장협회와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북한 전역에 종합적인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올해도 황해남·북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주민 15만명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2004년부터 콩 농장과 두부 제조공장, 두유, 콩기름 공장 등을 세운 황해북도 곡산군에 된장과 간장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고 VOA는 전함. GRS는 또 북·미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 중국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미국인 강사들이 평양외국어대학 영문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2년에 한번씩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캐스팅 크라운즈’, ‘애니 모세스 밴드’ 등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스프링스 회장은 설명함.

### ● 北 식량지원거부..美 실망(3/18)

-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 온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돌연 거부의를 밝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의증을 탐색하면서 일단 실망감을 표시함.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식량 지원을 받지않겠다는 북한의 통보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함.
-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40만t, apr시코 등 5개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직·간접 지원한다는 계획대로 대북지원 약속을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미국은 지금까지 16만9천t을 전달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옥수수과 콩 5천t을 지원했다. NGO들은 이미 5만t을 북한에서 분배했으나, 나머지 2만t은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임. 이런 와중에 북한의 이번 거부 의사 표시로 지난해 2년반만에 재개됐던 미국의 식량지원은 목표의 50%도 채우기 전에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됨.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북한이 최근 WFP 모니터 요원들을 추방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가 분배모니터링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함. 북한은 미국이 식



량분배의 투명성을 이유로 북한의 곳곳을 들여다보려 한다는 의심을 가져왔음. 이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모니터 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거부감을 보여오다 이를 구실로 아예 식량을 받지 않겠다고 강공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임. 북한 입장에서는 ‘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놔 앞으로 식량지원 때마다 모니터를 당해야 하는 불편을 차제에 막겠다는 뜻도 있어 보임.

### ● 北, 美 식량지원 거부(3/18)

- 우드 부대변인은 또 이번 통보에 대해 “분명히 북한인들로부터 전달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통보가 뉴욕채널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임. 그는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북한인들에게 식량 제공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식량지원 거부)은 우리가 2008년에 북한과 체결한 협정 이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함.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은 분명히 식량지원을 원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언급하고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진정한 인도적인 관심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함.
-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미국과 북한이 2008년 5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이뤄져 온 것임. 그는 “미국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북한에 16만9천t의 식량을 전달했고 미국의 마지막 대북 식량 선적분인 5천t 가량의 야채 기름과 옥수수과 콩은 지난 1월에 북한에 도착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해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이미 전달된 식량이 목표로 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미국 NGO들과 북한 측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 “美, 北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3/18)

- 미군은 북한이 발사하는 어떤 탄도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고 미 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미 북부사령부의 빅터 레뉴어트 사령관이 17일 밝힘. 북미항공방어사령부 사령관이기도 한 레뉴어트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오늘 우리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쏜다고 우리가 감지한다고 해도 미국은 그러한 필요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함.
- 레뉴어트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지상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물음에 미군은 북한을 “매우 제한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체제”라고 답변함. 미 북부사령부는 북한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상 중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운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 ○ 오바마, 北발사체 ‘요격 딜레마’(3/17)

-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명성 2호’를 다음 달에 발사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를 요격할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AFP 통신이 16일 분석함. AFP 통신은 이날 ‘북한의 발사로 오바마 격추(shoot-down) 딜레마에 직면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함.
- 통신은 또 요격의 군사적 성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요격 후 북한의 보복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실제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몇 분이 요격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광명성 2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발사 초기단계(boost phase)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해상의 미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요격을 명령할 수 있음.
-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관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발사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로 향할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등에 도달할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함. 발사체의 궤도가 드러나는 시점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미사일방어기지에 명령,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의 발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바 있음.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요격에 나서지 않고) ‘자제’하는 쪽을 택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돼 김정일 정권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AFP 통신은 내다봄.
-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요격을 명령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 베넷 연구원은 이 경우 “미 의회는 물론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함. 미국의 외교적 대응 역시 딜레마라고 AFP 통신은 말함.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의 ‘나약함’(weakness)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격렬하게 반응할 경우 이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AFP 통신은 분석함.
-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 갓 출범한 빌 클린턴 행정부를 시험한 바 있음. 미국진보센터(CAP)의 앤드루 그로토 연구원은 “그들(북한)은 주목을 끌기 원하거나 외교적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이 두려울 때, 역내 국가들에 자신들이 맞설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마다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지적함.



### ● 유엔, 북한 고위층 생존행태 비판(3/17)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주장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특별보고서’를 통해 그 같이 말하고 “그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환경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함.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악명 높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따른 유독한 결과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임. 이에 북한측 대표는 답변권을 행사해 “조작과 날조를 가득찬 그의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반발함.
- 단기 대책과 관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공급 및 접근 보장, 국가의 간섭 없는 경제생활을 통한 기초육구 충족 및 생계 보완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함.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약 870만명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나 올해초 180만명만이 식량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약 690만명은 전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임. 이와 함께 그는 ▲송환 탈북자 처벌 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종식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협력 등을 촉구함.
- 장기 대책과 관련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그는 “북한은 또 ‘선군(先軍) 정책’이 아니라 ‘선민(先民) 정책’에 기초해 공정한 개발조치들을 채택하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분배하며, 식량안보와 관련된 더욱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함.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만연한 감시·정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법·교도 시스템을 개혁하며,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끝으로 그는 “국제사회는 수백만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에 정당한 관심을 갖고 더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함.
-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권을 통해 “우리는 특히 최초 탈출지나 경유지에서 겪는 북한 탈북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관련 국가 및 유엔기구들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함.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과장은 답변권을 통해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 조선 적대 정책의 산물 일 뿐아니라, 인권을 정치화하려





는 유럽연합(EU)의 시도”라면서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깎아 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문건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함. 그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일 뿐 아니라 큰 착각”이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다. 중·북 관계

##### ● 김영일 北 총리 방중 마치고 귀국(3/21)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 등 북한 대표단이 21일 4박5일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음. 김 총리 일행은 기자들을 향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11시40분(현지시간) 북한 고려항공 편에 올라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을 출발했음.
- 김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음.
-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 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지난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했음. 김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수행해 북중 경제협력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음.

##### ● 北총리, 후진타오 예방…김정일 방중 협의(3/19)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총리가 1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임. 중국 신화통신은 김 총리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만나 김정일 위원장의 안부를 전달하고 조중 우호의 해는 젊은 세대에게 북한과 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후 주석은 “김 총리의 중국 방문과 이번 중북 우호의 해가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 최고 지도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와 다음달 15일 김일성 수령 생일인 태양절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함. 이들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1월과 2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이미 방중 초청을 수락한 상태”라고 덧붙임. 이들은 또





중국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이날 밤 8시(현지시각)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을 공식 선언함.

- 김 총리는 개막사에서 “조선과 중국의 우의는 양국 인민 공동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조선 당과 정부는 조·중 우의를 중시하며 조·중 전통 우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함. 이에 앞서 원 총리도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맞닿은 이웃 국가”라면서 “조선은 신중국 건국 이후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 중의 하나며 양국 인민들의 우의가 깊다”고 말함. 그는 이어 “양국은 수교 60주년 동안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 발전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함. 이번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는 북한 문화성과 중국 문화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양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2천여명의 귀빈들이 양국 예술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함.

#### ● 中, 北총리 방문에 극진한 대접(3/17)

- 중국이 17일 공식 방중한 김영일 북한 총리 일행을 크게 환영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베풀고 있음. 중국은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김 총리 일행을 후정웨이(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가 영접함.
- 후 부장조리는 지난 1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 등과 회담하고 북중 우호의 해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인물임. 후 부장조리는 김 총리를 크게 환영하면서 1시간 가까이 공항 영빈관 귀빈실에서 환담을 나눔. 중국 외교부 직원 10여명도 함께 나가 북한 대표단 일행을 영접했고 산둥(山東)성 지방 시찰에도 동행해 북한 대표단의 방중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함.
- 중국은 김 총리 일행의 지방 방문을 위해 특별 전세기까지 띄움. 김 총리는 후 부장조리와의 환담을 마친 뒤 40여명의 일행들과 함께 공항 영빈관에서 곧바로 활주로로 나가 준비돼 있던 에어차이나 전세기를 타고 산둥성 지난(濟南)으로 향함. 중국은 카운터파트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행사 외에 권력 서열 1~2위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안배함. 중국은 18일 저녁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의 해 개막 행사 외에 원 총리와 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서 별도의 환영 행사도 기획.
- 중국은 공식 친선 방문인 김 총리 일행의 방중과 관련해 대표단의 숙소비용 등 경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외교소식통들은 이번이 공식 방문인 만큼 의전상 인민대회당 인근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인공기가 게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북한 역시 김 총리 외에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장차관급 인사 6명을 포함해 40여명이 방중길에 올라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중



시하고 있음을 강조함.

### ● 김영일 北총리 방중일정 시작…첫날 공자묘 시찰(3/17)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가 17일 산둥(山東)성 시찰을 시작으로 4박5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감. 김 총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 30여명은 이날 오전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영접을 받으며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함.
- 200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중한 김 총리는 공항에서 간단한 환영의식을 마친 뒤 중국이 마련한 중국국제항공 전세기 편으로 산둥성 성도인 지난(濟南)시로 향함. 외교 소식통들은 “김 총리는 산둥성 지도부와 회담을 하고 타이산(泰山)과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취푸(曲阜)시 공자묘와 공자 생가 등을 둘러본다”고 말함. 김 총리 일행은 지난시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8일 베이징으로 올라와 숙소에 여장을 풀고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양국 총리회담을 거행함.
- 소식통들은 “양국은 이번 총리회담에서 양국간 무역을 늘리고 중국의 대북 투자를 촉진하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장려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이번 북한 대표단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과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부성 부상 등이 김 총리를 수행함.
- 소식통들은 또 “양국 총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대북 경제지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김 총리와 원 총리는 총리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 국가대극원으로 자리를 옮겨 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할 예정임.
-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60여건의 행사와 활동을 벌임. 이어 김 총리는 19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20일에는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며 베이징 인근 공업단지과 기업들도 시찰함. 한편 원자바오 총리도 오는 10월 이후 평양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답방할 예정임.

### ● “中, ‘北로켓’ 유엔결의 위반 부인안해”(3/1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동참여부에 대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은 중국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이해한다”고 밝힘.
-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소 다르지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6자회담 프로세스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이어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으니 발사시에는 자동적으로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유 장관은 다만 “어떤 강도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이 단순한 장거리 로켓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곧 대량살상무기(WMD)가 되는 것이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함.
- 유 장관은 미사일 문제가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미·북 양자 간에 논의됐었다고 소개한 뒤 “6자회담 틀 내에서 각국 간 양자접촉이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함.

## 라. 일·북 관계

### ● 日 외교청서, 북한핵·납치문제 비판(3/17)

- 일본 외무성은 17일 자민당 외교관계합동 실무회의에서 올해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담은 2009년 외교청서 원안을 제출, 승인받음. 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검증의 구체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어 원안은 북핵 6자회담에서 관련국가와 연대를 계속하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일종의 백서로, 내달 3일 각료회의에 보고함. 이 원안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셔틀외교를 추진했다”고 명시했고 지난해 일본의 대북 외교를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가 함께 진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총괄함.
-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탄생을 계기로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서 불가결하다”고 강조함. 중국과는 지난해 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등 “빈번한 수뇌간 대화가 이뤄진 역사적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착실히 진전시켰다”고 명시함.

### ● 日, 北로켓발사 강행시 추가 독자제재 시사(3/16)

-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는 북한에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중인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담당 국장인 사이키 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4월 13일 해제 예정인 일본의 대 북한 제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확고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현재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같은 제재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6자회담을 속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함. 사이키 대표는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 행동이, 미사일 발사든 인공위성이든 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의했다”며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강행된다면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마. 기타

##### ● 문타폰 “북한 870만명 식량불안정 상태”(3/20)

- 북한 주민 870만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이 밝힘.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호주 멜버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과 호주 북한인권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덴비 국회의원) 공동 주최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지역의 날씨가 비교적 좋았음에도 작황이 늘지 않은 것은 비료 및 연료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870만명 가량의 주민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함.
- 문타폰 보고관은 또 “고문이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곤경을 완화하는 데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인권침해는 장기지속성과 잠행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 지금이 국제사회가 식량 및 인권 문제 등을 다룰 적기”라고 말함.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즉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 및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개처형 등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체제를 개혁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면서 체제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민우선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발전정책을 세우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할당하라고 촉구함.
- 문타폰 보고관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예방과 효과적인 보호, 접근 가능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서의 보호와 원조 제



공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함.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38선 이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악스러운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촉구함.

- 우에다 히데야키 일본 인권대사는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가려져왔다”며 “고문, 강제수용소, 사상의 자유제한, 여성·장애인 권리침해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주장함. 제성호 한국인권대사는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한층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함.
-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문 및 답변, 기타 행사 등이 이어짐. 특히 첫날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요덕 스토리’ 제작자 토스타인 그루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씨가 대화를 나뉘 눈길을 끌었음. 21일에는 마이클 포쇼우 호주 상원의원과 김석우 한국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그렉 웨리단 호주 저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략 원탁회의가 열림.

### ● 대북 지원 단체들 방북 재개(3/20)

-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이 20일 종료함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들이 21일부터 대거 방북길에 올라 북측과 올해 사업 계획을 협의하거나 합의를 체결할 예정임. 이들 단체 상당수는 당초 지난 9일 시작된 키 리졸브 기간에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방북 자제를 권고하고 북측도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방북이 늦춰짐.
- 이 가운데 21일 하루만해도 6개 단체가 동시에 방북할 것으로 확인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보건의료 및 농업개발 사업 협의를 위해 21일 중국을 경유, 방북함. 운동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키 리졸브 기간중인 지난 18일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하며 10여명이 방북, 24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밝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측도 21일 방북, 평양에 양묘장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돼지농장 축사를 세울 계획이며, “초청장은 나온 지 오래 됐다”고 말함.
- 보건분야 지원사업을 하는 장미회도 21일부터 24일까지 7명이 방북, 평양 중앙연구소 현대화 사업과 간질보건센터 지원 사업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역시 지난 18일 초청장을 받음. 어린이어깨동무도 같은 날 방북하며, 등대복지회 역시 같은 날 방북해 1주일간 장애인복지 사업장들을 둘러보고 특수학교를 방문함.
-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올해 사업계획 협의를 위해 경남도 행정계장을 포함한 실무진 7명이 21일 방북, 콩우유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데 이어 내달 1일엔 경남도 부지사도 포함된 방북단이 평양에 가서



올해 사업계획 협의서를 체결할 계획임. 경남통일농업협력회측은 다만 경남도 행정계장이 방북에 동행하는 점과 관련, 통일부에 방북 허가 여부를 문의했으나 통일부측은 키 리졸브가 끝났지만 상황이 ‘유동적’인 점 등을 들어 허가 여부를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해 21일 방북이 확정적이지는 않음.

- 이들 단체 외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김상근 신임 상임대표를 비롯해 7명이 방북함. 위원회 관계자는 “북측의 불만도 듣겠지만 북측에 현 긴장상태가 지속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무엇보다 6.15 기념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또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는 28일부터 4월4일까지 방북하며, 나눔인터내셔널은 4월1일부터 4일까지 방북해 검진센터 등 병원 사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임.

### ● 英, ‘위성발사’ 우려 北에 직접 전달(3/19)

- 방한 중인 빌 램펠 영국 외교부 아.태담당 부장관은 영국이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발사가 이뤄지면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램펠 부장관은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국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영국 주재 북한대사(자성남)를 런던 외무성으로 불러 영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고 평양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함. 그는 이어 “국제사회와 합동으로 북한의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함.
- 램펠 부장관은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 위성이건 미사일건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아직 없다”고 전함.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자체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발사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제 사회와 논의해 강한 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 조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취해질지 밝힐 단계는 아니며 발사 시도를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영국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램펠 부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됨. 그는 또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 북한을 설득해 발사시도를 멈추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북한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영국은 북한에 강력한 외교적 제재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재강조,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음.





- 람멜 부장관은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상유지에 급급했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 요구는 어느 한 나라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목소리”라고 강조함.
- 그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추가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과거에도 고의로 식량 지원 거부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염려될 뿐이며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함.

### ● EU “北, 유엔 결의 이행해야”(3/17)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EU 집행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먼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프로세스(결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말함. 호먼 대변인은 또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북한을 거듭 압박함.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라고 덧붙임.

### ● 국내외 500명 참여 ‘통일준비 단체’ 출범(3/17)

-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연구단체 ‘한민족통일준비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함. 발기인으로는 강승규 비전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한승조 전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 고영주 사학분쟁조정위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해 미국 하와이 한인회장, 조옥재 일본 재일본 한국인연합회장 등이 나섬.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인수 이승만박사 기념관 이사장, 강대봉 성균관 유림총본부 회장,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는 고문을 맡음.
- 이 단체는 발기인 선언문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은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으나 정작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차원의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통일 이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이어 “위원회의 창립이 통일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안정시켜 제2의 국가발전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임. 이 단체는 오는 7월 이사회를 열어 상임회장에 내정된 손병두 총장을 회장으로 공식 선임하고 연말까지 미국 등 해외에 5개 본부를 설치할 예정임.



### ● “중장기관점서 대북정책 검토해야”(3/16)

- 정부는 16일 오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문제로 악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타개 방안을 논의함.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상황 등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 고문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됨.
-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군사·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접 관계되는 중소기업이나 일하는 분 등 많은 사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현 남북관계 상황은) 간단히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공세를 강화해오다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민항기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히 지난 며칠간 개성공단 통행을 연이어 제한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올렸다”고 비판함.
-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고문들은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운행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함. 고문들은 또 통일부가 당면한 현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의 의미에 대해 김 대변인은 “통일부가 현안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나가라는 뜻”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자국민 보호원칙과 남북합의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원칙론도 대두됨. 특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이 두 사안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함.
- 또 이번 북한의 위협 조치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통합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고문회의는 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함.

### ●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법 조속제정 촉구(3/16)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관련 토론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서경석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상임대표대행은 축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나라당도 주춤하고 있으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해서라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발제자인 구본태 서울여대 객원교수는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사회에서 이제는 ‘수령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고가 퍼지는 등 북한에 자기 개인 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북지원 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한 ‘퍼주기’였다면 앞으로는 인권법 제정으로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토론자로 나선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대표는 “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개처형을 지켜보며 자라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서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비판하거나 개인의 삶을 주장해 경제범죄를 지으면 당연히 목숨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북한 스스로는 변화가 안되니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법을 제정해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나 최은상 공의정치연대 사무처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론에는 100% 공감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닌데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 제정으로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 등 “모든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인권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 ● 제주해협은 남북관계 급랭에도 ‘화평’(3/16)

-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민간선박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주해협이 ‘평화의 바닷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2005년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지름길인 제주해협에 대한 북한 민간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 16일 제주해협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올해 들어서도 1월 17척, 2월 15척 등이며 이달 들어서도 8일 현재까지 40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14척, 2월 13척 등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임. 지난 2005년 8월 북한 민간선박이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한 이후,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이 통항하는 등 매년 증가해 옴.
-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지금 이 시간 북한 화물선이 우리 영해를 지나고 있고, 이 배는 제주해협을 통과해 서해를 거쳐 북한 남포로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매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제주해협은 우리측 영해이자 국제법상 제3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정전체제의 남북 간에 교전 상대국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허용되지 않았었음. 그러다 2001년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2002년 10월부터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해운합의서가 2004년 5월 채택돼 2005년 8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그해 8월 15일 남포선적 9천t급 화물선 대동강호가 처음 제주해협을 통과함.

- 제주도-추자도 해역에 진입한 대동강호는 이후 제민1호의 안전 및 보호 경비를 받으며 제주해협을 통과했고 공해상을 거쳐 목적지인 청진항으로 항해함. 이처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253마일인 제주도 남쪽 항로대보다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25분 정도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임.

### ● <황장엽 “김정일과 회담하면서도 기대말아야”>(3/16)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16일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외양적으로는 존중히 여겨 악수합시다, 회담합시다 하면서도 절대로 무엇을 기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함. 황 전 비서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황장엽 민주주의 강좌’ 프로그램에서 ‘김정일,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함.
- 황 전 비서는 “김정일은 30년동안 중국 사람들이 같이 개혁개방하자고 해도 말을 안들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자기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김정일은 자기 소신을 굴함없이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함.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빌어먹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로 봐야 한다”고 황 전 비서는 주장하고 그러나 “시종일관 여기를 적화하자는 것이 김정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김정일 집단과 대화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기대할 게 없다”고 주장함.
-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화 가능성을 말한 데 대해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주장하고 또 “이번에 누가 김정일을 찾아가서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역시 철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임.
- 황 전 비서는 ‘그 사람’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이재오 전 의원이 워싱턴에서 가진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북한 문제를 풀려면 김 위원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황 전 비서는 한편 “요전에 책임적인 기관에서 (자신에게) 와서 ‘이런 통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이제강을 비롯한 핵심들을 이간시키는 정책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음.



- 황 전 비서는 이러한 문의에 자신은 “그런 공상을 하지 마시오. 그들이 왜 이간 당하겠는가. 그런것 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미끼가 끼어서 목이나 끼우게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그런 힘이 있다면 김정일 정권에 물들지 않은 북한 동포들을 끌어당겨야 한다”고 덧붙임. 그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선 김정일 정권에 대해 경이원지해야 한다”며 “겉으로는 상당히 존중히 여기면서 내부적으로는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경계하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주장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중 관계

#### ● 리창춘 방한..한중 고위급 교류 본격화(3/19)

- 리창춘(李長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당 서열 5위)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다음달 4~7일 방한함. 정상외교 차원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중국 공산당 고위인사가 한국을 찾는 것은 1998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의 방한 이후 11년 만임.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작년에 한·중 정상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자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리 위원은 중국 공산당 서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이어 5위의 고위급 인사로 당의 선전·사상 담당임. 수행원도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장관급만 6명에 이른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함.
- 리 위원이 중국 언론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그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중국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험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특히 북·중 간의 협의는 주로 외교 채널이 아닌 당 채널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그로부터 북한 내부사정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리 위원의 방한기간(4월 4~7일)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시기(4월 4~8일)와 거의 일치하는 점도 관심거리임. 외교 당국자는 “리 위원의 방한 일정은 한 달 전부터 협의가 이뤄지던 사항으로 북한의 발표보다 훨씬 전”이라며 “일정이 묘하게 겹치기는 했는데 둘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나. 한·일 관계

### ● 韓日, 北미사일 발사저지 공조키로(3/16)

- 일본을 방문 중인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낮 일본 외무성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목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양국이 연대해 저지하자는데 합의함.
- 아울러 두 사람은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이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힘. 위 본부장은 이에 앞서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갖고 현재 정체 중인 6자회담 타개책도 협의함.

## 다. 미·중 관계

### ● <中-美 남중국해서 정면 대치 국면>(3/19)

- 주변국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남중국해에 미국이 이지스함을 출동시킨 데 맞서 중국이 순시선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간의 영유권 분쟁이 이 해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둘러싼 중-미 대결 국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중국 순시선 추가 파견 = 19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각각 해역별로 나눠 순시하던 중국 최대 규모의 어업 단속선인 '어정(漁政) 311호'와 어정 301호, 어정 460-2호등 3척의 함정이 18일 베트남과의 분쟁해역인 시사(西沙·파라셀)군도의 천항다오(琛航島)에 집결한 후 정보를 교환함.
- 해군 군함을 개조한 4천600t급의 311호와 301호는 조만간 베트남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베이부만(北部灣·통킹만)으로 이동, 해상 순찰에 나섬. 어정 311호가 추가 파견됨으로써 현재 1천t급의 4척을 포함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5척으로 늘어났음. 이 어업지도선들은 필리핀과의 분쟁해역인 난사(南沙·스프레틀리)군도와 황옌다오(黃岩島)로 이동해 순찰과 경계 활동을 하며 이 해역이 중국 영해임을 과시할 예정임.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의 순시·경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척의 퇴역 해군 함정을 어업순시선으로 개조해 남중국해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관영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함. 이와 관련 국제선구도보는 중국이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2천500t급의 신형 어업지도선을 내년에 추가 배치하고 3년에서 5년 이내에 3천t급 지도선 5척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함. 이에 따라 2012~2014년이 되면 남중국해



- 상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어업지도선은 11척으로 늘어나게 됨.
- 미 이지스함 출동 = 미국은 일본에 정박 중이던 이지스함 USS 중원호를 남중국해에 파견함. 홍콩의 문화보(文匯報)에 따르면 이 이지스함은 남중국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비무장 선박인 임페커블호를 호위할 예정임. 미국은 이 최신 구축함과 함께 핵잠수함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남중국해로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신문은 분석함.
  - 중-미 갈등 원인 = 중국은 지난 8일 남중국해 하이난(海南)섬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 5척을 동원, 미국의 정보수집 함정인 임페커블호의 항해를 방해하며 상당 기간 대치를 함. 미국은 민간 함정에 대한 공격이라며 거센 항의를 했고, 중국은 임페커블호가 사실상 간첩선으로 중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남중국해는 300만km<sup>2</sup>에 달하는 방대한 해역으로 해저 자원이 풍부해 중국과 인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곳임. 미국은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보다 해군력이 약하자 이들을 지원,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의 세계신문보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중국에 맞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필리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필리핀과의 관계를 빌미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함. 신문은 미국과 필리핀은 상호 방위협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전통적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기타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관측의 근거로 제시함.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석유 등 전략물자 해상 수송의 길목이기 때문에 영해 수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임.
  - 영유권 분쟁 =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0일 난사 군도와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영해기선법안에 서명해 중국 측의 반발을 샀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순시 활동 강화와 동시에 필리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리젠궈(李建國) 상무부위원장이 당초 18일 필리핀을 방문, 아로요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방문 일정을 연기했는데 이는 필리핀이 ‘영해기선법’을 통과에 대한 항의 조치의 하나로 분석됨.

#### 라. 미·일 관계

##### ● “美·日, 北미사일 대응 외무회담” <NHK>(3/19)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이달말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



정을 조정을 하고 있다고 NHK방송이 19일 보도함.

- 일본은 클린턴 장관의 제의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루는 각료급 회의가 오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NHK는 전함.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이 설사 인공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에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 중·일 관계

##### ● “아소 日 총리, 중국 방문 연기” <마이니치> (3/17)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7일 보도함. 이는 중국측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통보해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양국 정부는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담 이전에 아소 총리의 방중 및 정상회담을 추진해옴.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소 총리의 방중 연기는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에 대한 최근 일본측의 자국 영유권 주장 때문에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양국 모두 아소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오는 6월까지의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마이니치는 전함.

#### 바. 일·러 관계

##### ● “아소, 러시아에 영토문제 선결 요구” (3/16)

- 지난달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양국간 분쟁이 되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6일 보도함. 신문은 아소 총리가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로서 러시아와 호혜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나 평화조약 체결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아소 총리는 또 “러시아가 이 문제(영토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호혜관계는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측을 압박함. 아소 총리는 이런 발언에 이어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때까지 러시아측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함.
-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홋카이도(北





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기간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러시아 측이 이후 영토 문제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아소 총리가 사실상 최후 통고를 한 셈이라고 도쿄신문은 분석함.

- 북방영토는 홋카이도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의 4개 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곳임. 지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양국의 도쿄선언에서는 영토문제가 이들 4개 섬의 귀속문제라는 점을 확인, 4개 섬 전체에 대한 처리 문제로 확산되면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섬의 귀속 문제가 해결돼 국경을 명확히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 기타

##### ● <日거주 대만인 국적변경 논란 예상>(3/20)

- 일본이 3년 후부터 자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에게 ‘대만’ 국적을 기입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일본 정부가 최근 의회에 상정한 출입국관리법 수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외국인 거류카드제에서 대만인은 국적란에 대만으로 적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20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을 인용, 보도함.
- 일본은 현재 자국에 3개월 이상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 제도를 오는 2012년부터 거류카드제로 바꿀 계획임. 외국인 등록증제도는 일본에 거류하고 있는 4만2천여명의 대만인에게 국적란에 ‘중국’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국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대만인 4만2천명을 포함해 모두 60만여명에 이름. 중국 외교부는 이날 현재로선 일본의 새 조치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종전 일본의 대만 정책과 관련,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중국 통일과 중·일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 한편 천수이벤(陳水扁) 전 대만 총통과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은 일본거주 대만인에게 대만 국적을 허용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 촉구했었음. 일본은 중국-대만간 양안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얻었으나 양안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런 ‘꽃놀이패’가 사라져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 차베스 대통령 내달 일본 방문(3/19)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내달 초 일본을 방문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19일 밝힘. 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을 찾는 차베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아소 다로 (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원유·가스 개발 양해 각서에 서명할 예정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석유 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공급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음.

### ● 中, 새 중동특사에 우쓰키 임명(3/19)

- 중국은 새 중동특사에 우쓰키(吳思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 위원회(전국정협) 위원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3년동안 중동 평화와 중국·중동간 관계발전에 기여한 쑤비간(孫必干) 중동특사의 후임으로 우쓰키 전국정협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힘.
- 우 신임 특사는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국 국장과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주이집트 대사를 지낸 중동 전문가로 중국 정부의 중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친 대변인은 덧붙임.

### ● “中, 위기 뒤 강해진다” 전망 잇따라(3/17)

- 현재의 금융위기가 지나가면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경쟁 상대가 돼 있을 것이라는 미국 신문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음.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중국이 외국에서는 기업과 자원을 사들이고 국내에서는 실직자들을 재교육시키는데 보유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중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봄. NYT는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겨났던 물가 상승이나 지나친 수출 의존, 부동산 가격 거품 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풀이함.
- 워싱턴포스트(WP)는 NYT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외국 기업과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에 주목함. WP는 지난해 중국의 외국기업 인수 총액이 521억달러였고 중국이 지난 1, 2월에만 163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는 수치를 인용하며 중국의 해외 자산 인수 양상이 1980년대 일본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함.
- 이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 브라질,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차관 공여를 조건으로 석유를 장기간 공급받거나 유전 개발권을 획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부터 잇따라 체결함. 중국 국영 알루미늄 회사는 호주 광산회사 리오틴토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19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중국 자동차회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외국 자동차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또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90여명의 기업 경영진과 함께 유럽으로 ‘쇼핑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가격이 떨어진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을 사기 위한 여행단이 조직되기도 했음. 이쯤 되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새로운 투자와 수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

- 경제위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부진이라는 타격을 입었지만, 항공 및 해상 운송료가 지난해 이후 60% 이상 떨어지고 중국내 노동 비용도 급락한 점은 오히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됨. 인텔이나 영국 IMI같은 몇몇 다국적기업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생산 시설을 축소하면서도 중국 투자는 오히려 늘리는 모습 또한 중국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거론됨. 미국 신문들은 중국이 위기 뒤에 더 강해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점들도 열거함. 중국 경제가 여전히 대규모의 자본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고급 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자칫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과제들임.

#### ● 日, 인도·브라질·남아공과 차관급 회담(3/17)

- 일본 정부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과 차관급 정책 대화를 신설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가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만큼 앞으로 유엔 개혁이나 테러, 금융위기 등의 국제적인 과제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또 이들 3개국은 원유나 희귀 금속을 풍부하게 보유한 만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나 무역 확대도 도모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늦어도 올 8월까지 이들 국가와 정책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첫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각국과 조정 중임. 회의 주제는 환경 및 기후변동, 유엔 안보리 개혁, 식량문제 등으로 잡고 있음.

#### ● “북한 전력난이 체제위협 요인”(3/16)

-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북한 주재 경력이 있는 서방 외교관들이 말함. 파이낸셜타임스(FT)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문제 전문가들과 서방 외교관들은 서울 주재 서방 대사관들이 개최한 북한관련 한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이 굶주림이나 김정일의 건강문제 만큼이나 같은 무게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함.
-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은 반짝이는 한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암흑의 공백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홍수로 물이 찬 석탄광산, 수력발전소 부족, 석유수입 감소로 바늘로 콧속 찌른 듯한 얼마 안 되는 밝은 지점마저 점점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몸체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말함.
- 1992년부터 북한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노틸러스 연



구소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가 1990년 1천300 페타줄에서 2005년에는 500페타줄로 줄었다고 밝힘. 1페타줄은 2만3천885t 정도의 석유가 낼 수 있는 열량이다.

- 이런 에너지 수요 감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힘. 2005년 이후 전력생산이 다소 회복됐지만 재난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임. 북한에서 에너지 생산의 70%는 석탄에서 나오지만 전체 광산의 60%가 물에 잠기면서 채굴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어려움에 처했고 석탄채굴 부족은 난방과 조리용 연료부족으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헤이즈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이라면서 “농촌주민들이 땀감을 찾기 위해 나무를 베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말함. 지난해까지 평양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한 존 에버라드는 “북한에 새로 만든 수력발전소를 가봤더니 1938년 스웨덴계 터빈을 장착하고 있었다”고 말함. 그는 “(정치·경제적)시스템이 너무 쇠약해 종말이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함.

#### ● 경제위기속 中 아프리카 투자 지속(3/17)

- 경제위기로 속속 떠나는 서방 투자자들과는 달리 중국은 오히려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함. 츠젠신 중국아프리카발전기금(CADF) 최고경영자(CEO)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10억달러 투자를 끝낼 것이라고 밝힘. 2006년 말 출범한 CADF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4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20억달러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츠젠신 CEO는 예상함.
- 그는 또 CADF는 내년에 20억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2단계 투자에 착수, 목표치인 50억달러에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덧붙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업 중심지 요하네스버그에 CADF 대표사무소 개소를 앞둔 가운데 츠젠신 CEO는 “다른 투자자들이 찾지 않는 아프리카는 중국의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함.
- CADF는 2006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 직후 설립됐으며 중국개발은행(CDB)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CDB는 중국 국무원이 직접 통제함. 중국의 투자 계획에는 에티오피아·말라위·모잠비크 농업 투자, 4억5천만달러 규모의 가나 발전소 투자, 이집트·나이지리아 산업단지 투자 등이 포함돼 있음. 중국의 활발한 아프리카 투자는 경제위기로 아프리카를 떠나는 서방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남아공 주식시장에서 540억위안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중국인들은 오히려 630억위안이나 투자함.



- **中, 이란 유전에 속속 진출(3/16)**
  - 이란 국영 텔레비전방송은 15일 중국측 컨소시엄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기 위해 이란 국영 LNG사와 33억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계약으로 연간 1천50만톤의 LNG를 공동 생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측 컨소시엄의 이름과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방송은 이 계약에 따라 파르스 가스전의 12단계째 가스 액화시설 건설과 다른 가스전 블록이 중국측에 넘겨진다면 가스전이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함. 방송은 이어 이 사업이 3년내에 이행될 것이라면서 3개월 안에 유럽의 한 회사가 중국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중국과 이란은 지난 1월에도 이란 서부의 북 아자데간 유전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의 17억6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음. 서방의 석유 메이저들이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세계 제2의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란에 대한 투자를 거절해 오면서 이란은 그 핵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를 가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란은 지난 11일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이 전세계 매장량의 8%로 추산되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11단계 개발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구했다고 밝히기도 함.
  
- **“한반도 통일되면 日 핵무장 가능성”(3/17)**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함. CRS는 지난 달 19일 발간한 ‘일본의 장래 핵문제: 정책논의, 전망 그리고 미국 국익(Japan’s Nuclear Future: Policy Debate, Prospects, and U.S. Interes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
  -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일본은 핵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새 통일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 일본은 다른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특히 보고서는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핵무장한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일본에) 더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함.
  - 이어 보고서는 일본의 핵무장 여부 정책 결정은 한반도에 수립되는 새국가의 정치적 태도, 미국과의 관계, 통일한국 정부의 대일(對日) 관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함.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1965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혹독한 식민통치로 인해 일본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인접한 한국인들이 일본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면 일본은 핵무기 능력



을 개발하도록 더 많이 강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 미국은 한미동맹과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든 미국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향후 미국의 비상사태 계획에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일본의 계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함.

● **李대통령 “한·이란 협력분야 확대 필요”(3/16)**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아야톨라 하세미 샤루디 이란 사법부 수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서 상호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양국 국민간 상호 친근감을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특히 “이란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이란 사법부가 각별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샤루디 수장은 “이란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한국 기업과 협력하길 희망한다”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춘 한국 상품의 대(對)이란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함.
- 그는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사법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인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합의될 것”이라고 소개한 뒤 “이를 계기로 양국간 사법분야 협력은 물론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청와대 관계자는 “샤루디 수장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이란 국정을 이끌고 있는 핵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라며 “지난 1962년 한·이란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라고 설명함.



[참조 1] <北 미국인 억류 사례> (연합뉴스, 3/19)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취재 도중 억류된 것으로 19일 전해진 가운데 북한은 과거 간첩 혐의 등으로 미국인을 억류했다가 협상을 통해 풀어준 사례가 있음.

- ▶ 지난 1999년에는 기업 활동을 하던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됨.
- ▶ ‘합병·투자’ 명목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하던 서모 씨는 99년 10월29일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벌금을 내고 22일 만에 추방됐고, 그에 앞서 병원과 의류공장을 짓기 위해 99년 5월 방북했던 한모 씨는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그 해 6월 20일 중국으로 추방됨.
- ▶ 1994년 12월에는 강원 금강군 이포리 휴전선 지역에서 순찰비행을 하던 중 북한 영공으로 진입했다가 피격돼 붙잡힌 주한미군 헬기조종사 보비 홀 준위가 억류됐지만 미국의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이 방북, 북한과 협상한 끝에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됨.
- ▶ 1996년 8월에도 술을 마시고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헨지커 씨가 간첩 혐의로 북한에 구속됐다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11월 방북한 리처드슨 의원이 북측과 협상, 풀려남.
- ▶ 1958년 2월 미국인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과 승객 등 36명이 탑승했던 부산발 서울행 대한민항공공사(KNA) 소속 항공기 ‘창랑호’가 간첩에 의해 납북됐다가 3월에 26명이 귀환한 사례가 있음.
- ▶ 1968년 1월에는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측에 나포됐으며 북한과 미국이 11개월 간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이 사과한 뒤 그해 12월 미국 승무원 83명이 석방됨.

zoo@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19/0511000000AKR2009031922270014.HTML>